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2
----------	------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이개호 · 여기구 · 위성곤
조인철 · 김병기 · 전재수
서삼석 · 박지혜 · 이언주
차규근 · 김현정 · 박수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민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2년 기준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실제로 지난 10년간 농업경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 농약, 사료, 인건비 부분에서 40~70%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수적인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필수농자재로 분류된 물품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와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경우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에 관한 사항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및 지원한도
3.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2.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 7명
3. 농협중앙회 소속 임직원 1명
4. 농업 관련 학계 3명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점검 및 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